



주간통일정세 2013-03(2013.01.14 ~ 01.2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3-0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5년 만에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 개최 예고(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8일 전국의 노동당 말단 간부들이 참가하는 '전당 당세포 비서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감격 속에 받아 안고 전당, 전국, 전민이 필승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새 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다"고 밝히면서,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를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실현하는데 획기적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 이정표", "당 역사에 특기할 의의깊은 사변"등으로 규정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대회 개최 날짜는 밝히지 않음.
- 통신은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나가는 오늘 당세포 사업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켜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서 면모를 일신하는 것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라고 강조함.
- 북한이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고 2007년 10월 이후 5년 3개월 만임.

● 北 '신년사 관철' 내각회의 개최(1/19,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 북한 내각은 최영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과업을 관철하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인용해 19일 보도함.
- 이날 회의는 전승훈 부총리의 보고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고 내각 책임 일꾼과 관리국장들, 도·시·군의 인민위원장, 도 농촌경리위원장, 도 지구계획위원장, 도 식료일용공업관리국장들, 주요 공장 및 기업소 지배인들이 회의를 방청함.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을 중심으로 경제 분야에서 비약을 일으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이 올해 내각의 중심 과업이라고 지적함.

● 北김정은, 대성산종합병원 건설현장 시찰(1/19,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양 대성산종합병원의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9일 전함.



- 방송은 김 제1위원장이 군대가 건설 중인 대성산종합병원을 찾아 중앙홀, 수술실, 입원실, 아동병원, 구강병원, 기능회복센터 등을 돌아보고 건설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고 전함. 또한 김 제1위원장은 대성산 종합병원에서 약을 주는 장소를 방문해 "약 내주는 곳이라고 쓴 명찰에는 우리 글과 함께 국제 공용표기도 함께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입원실에서는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꾸렸다고 칭찬했다고 밝힘.
 - 특히 그는 의학부문의 과학화, 정보화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 국가적인 의학정보자료기지를 구축해놓고 병원이나 진료소와 같은 말단 보건기관에서도 그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게 종합적인 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함.
 - 대성산 기슭에 세워진 대성산종합병원은 연건축면적이 10만여㎡이고 병동 3개에 실험과, 내시경과, CT과, 종합수술장, 집중치료실, 마취소 생과 등을 갖추고 있음.
 - 이날 시찰에는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박도춘 노동당 비서,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박태성·황병서·마원춘 당 부부장, 전창복 상장 등이 수행함.
- **中 언론 "北 김정은, 김일성 닮기 성형수술"(1/20, 중국네트워크 TV(CNTV); 선전(深천(土+川))위성TV)**
- 20일 중국네트워크TV(CNTV)등을 비롯한 중국 언론매체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성형수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함.
 - 이날 중국네트워크TV(CNTV)에 따르면 중국 선전(深천(土+川))위성 TV는 전날 '중견 언론인' 2명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닮아 보이기 위한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함.
 - 중국 언론인 관야오(管姚)는 이 방송에서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 외교관의 전언을 소개하며 "우리 외교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사적인 대화에서 북한 외교관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조부(김일성)와 똑 닮았다고 하자 '확실히 성형수술을 했다고 답했다'고 전함.
 - 그는 "서방언론은 그(김정은)가 조부와 닮아 보이기 위해 2~3차례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보도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함.

■ 김정은동향

- 1/19,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 김태룡(청소년과외교양지도국 연구사) 외 9명에게 감사(1.19,중방)
- 1/19,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단계에 이른 대성산종합병원 시찰(1.19,중방·중통)
 - 최영림, 최룡해, 박도춘, 김경옥, 리재일,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허환철, 전창복 등 동행



- 1/19, 김정은 신년사 과업 관철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최영림(내각총리)·전승훈(내각부총리/보고) 등 참가下 진행(1.19, 중통·민주조선)
-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 총화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 토의 및 해당 결정 채택
- 1/20, 김정은 黨 제1비서, 시리아·나이지리아·콩고·우간다·에티오피아 대통령 등 김정일 사망 1돌 전문에 대해 답전(1.20, 중통·중방)
- 黨 중앙책에서도 중국 공산당 중앙책에 謝意 표명 답전(1.20,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박의춘(외무상), 1.15 이임 駐北 세계식량계획(WFP) 대표와 담화(1.15, 중통)

나. 경제

● 北, 전국 협동농장 분조장 대상 과학강습(1/14, 조선신보)

- 북한이 전국의 협동농장 분조장들을 대상으로 과학강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4일 보도함.
- 신문은 이날 북한이 올해 농업 분야에서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화와 집약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의 하나로 전국의 각 도, 시, 군들에서 협동농장 분조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강습이 연초 진행되게 된다"고 전함.
- 이어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도입하고 단위 면적에 농기계, 연유, 비료 등 생산수단과 노력을 집중투하하며 선진과학기술로 단위생산물당 노력과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도 높은 생산량을 얻도록 하기 위한 문제에 농업 부문의 일꾼들은 물론 현장 근로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함.
- 북한의 협동농장 최소 작업단위인 분조는 보통 15명 정도의 농장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문은 또 북한이 국가적으로도 농업 생산의 과학기술 바람을 일으키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농업성에서부터 전국의 모든 협동농장의 매 분조에 이르기까지 올해 농사의 계획 작성부터 종자 배치, 영농공정 조직 모두를 과학적 요구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시대 첫 자연개조사업은 축산단지 조성(1/20, 조선신보)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 등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해 온 북한에서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고 조선신보가 전함.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7일 "세포등판을 나라의 종합적인 축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이 전 국가적인 관심 속에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인민군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세포등판은 날을 따라 몰라보게 변모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 사회·문화

● 유엔 "김정은 체제 1년, 北 인권 처참"(1/14, 연합뉴스)

-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지 1년이 넘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처참한(deplorable)' 수준이라고 나비 필레이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함.
- 필레이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 20만 명이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수감자들에게는 고문과 성폭행, 강제노동 등 반(反) 인권적인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필레이 대표는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서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개선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함.
- 그는 또 "전세계에서 최악이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는 정당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상당히 늦었다"고 말했으며, 이날 성명은 유엔인권이사회(UNHCR)의 특별조사팀이 제출한 조사 결과와 함께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출한 생존자 2명과 의 면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필레이 대표의 대변인은 전함. 필레이 대표는 "탈북자들은 국제적인 인권규범과 반대되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고발했다"면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 여성은 신생아를 나뭇잎이나 낡은 양말을 꿰맨 이불로 덮는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소개함.

● 北 해주 고아원 어린이 92% 만성영양실조(1/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덴마크의 구호단체 '미션 이스트'가 지난해 11월 황해남도 해주의 고아원에서 영양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 92%는 만성적인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함.
- 또 이 고아원의 5만 이하 어린이 10%가 급성 영양실조에 걸렸고 36%는 급성 영양실조의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파악됨.
- '미션 이스트'는 고아원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어린이의 몸무게와 키 등을 조사했으며, 구호단체의 김 하르츠너 사무국장은 이런 통계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잘 보여준다고 "일부 어린이들은 당장 식량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정도"라고 말함.

● 北, 2012년 10대 최우수선수 선정(1/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런던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2012



- 년 10대 최우수선수로 선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통신은 17일 "조선에서 주체101(2012)년 10대 최우수선수, 감독이 선정됐다"며 지난해 열린 런던올림픽과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등의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물이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고 설명함. 10대 최우수선수에는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유도의 안금애, 남자역도의 김은국과 엄윤철, 여자역도 림정심, 그리고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여자역도 량춘화와 남자레슬링 양경일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 6명이 포함됨.
 - 통신은 런던올림픽에서 북한이 금메달을 딴 종목인 유도과 역도 대표팀 감독이었던 류주성, 박기성, 리춘경, 김춘희(여) 등을 최우수감독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임.
- **北, 연초부터 새 학제 준비로 분주(1/20, 조선중앙TV)**
- 북한은 작년 9월 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해 1972년부터 시행해 온 11년제 의무교육 제도를 1년 늘이기로 했음.
 - 당시 최고인민회의는 현재 4년제인 소학교를 2014~2015학년도부터 5년제로 운영하고, 올 가을부터는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분리운영하기로 결정했음.
 - 이에 따라 북한은 연초부터 내각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을 중심으로 새 학년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음. 현재 북한 당국은 새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사들이 새 제도에 맞춰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자질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음.
 - 조선중앙방송은 이달 18일 "현재 보통교육성에서는 새로운 교육강령이 완성된데 맞게 강력한 집필역량을 꾸리고 교정별 과정 안과 과목별 교수요강에 따르는 교과서 집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다"고 소개했음.
 -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말 열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12년제 의무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서 실시할지에 대한 결정을 심의 채택한바 있음.
- **북한, 방문 외국인 휴대전화 소지 허용(1/20, 연합뉴스)**
-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됐다고 북한-이집트 합작 휴대전화 업체 '고려링크'의 한 기술자가 2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지금까지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세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기고 출국 때 찾아야 했음.
 -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고려링크의 이집트인 기술자는 "지난 7일부터 세관에 휴대전화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하기만 하면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다"고 신화통신에 말했다.
 - 또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의 3세대(3G) 휴대전화 사용자는 50유로(한화 7만원 상당) 짜리 고려링크 유심카드를 사면 이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래 지린성이 맞이한 최대의 기회"라며 "창지투 전략을 중요한 가치로 세우고 관련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강조함.

- 지린성은 이에 따라 중국의 변경도시 가운데 유일한 국가급 경제특구로 지정된 훈춘(琿春)국제합작시범구를 중심으로 올해 변경무역, 물류, 수출가공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 유치에 주력할 방침이며, 특히 북·중 공동관리위원회가 정식 설립된 북한 나선 경제특구와 관련, 훈춘에서 나진항으로 가는 관문인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원정리를 잇는 새 교량(일명 신두만강대교) 건설, 투먼(圖們)-나진항 구간 철도 개조, 송전 시설 건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지린성 경제기술합작국 왕즈허우(王志厚) 국장은 "대북 합작에서는 나선 특구의 체제와 시스템 건설을 중심으로 대북 송전선로와 특구 내 기반시설, 건축자재 공장 건설 등의 추진을 촉진할 것"이라며 "대러시아 합작에서는 철도, 항구, 육·해 복합운송항로 등 교통 관련 인프라 확충과 산업·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美 AP통신 부사장 방북(1/14, 조선중앙통신)

- 존 다니제브스키 미국 AP통신 부사장이 14일 방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미국 AP통신사 부총사장 존 다니제브스키 일행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지만 방북 일정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AP통신이 지난해 1월 서방 언론사 최초로 평양에 종합지국을 개설한 점으로 미뤄 이번 다니제브스키 부사장 일행의 방북은 지국 개설 1주년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 EU "북한 식량사정 호전...올해 대북 지원계획 없어"(1/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밝힘.
- 방송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의 데이비드 샤록 대변인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긴급 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함. 그는 작년 10월 EU 조사단이 북한에서 식량 사정을 조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북한의 작황이 전년보다 좋아졌고 당국의 식량 배급량도 늘었다"고 설명함.
- 샤록 대변인은 작년 7월과 8월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해 32만5천 유로(약 4억6천만 원)를 지원했던 것이 EU의 마지막 긴급지원이었다고 말함. 그러나 그는 EU의 올해 긴급식량 지원 대상에서 북한이 제외되긴 했지만, 자연재해 등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임.



- "美민간단체, 5월 평양서 결핵연수원 착공"(1/15,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민간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벳들(CFK)'이 오는 5월 북한에서 결핵전문가 연수원의 건립 공사를 시작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전함.
 - 결핵전문가 연수원은 평양의 국립결핵예방병원에 약 56평(185㎡) 규모로 건설되고 공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계획이며, 북한에서 결핵전문가 교육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새 연수원이 세워지면 이론 수업과 실습이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北, 5년 만에 호주대사관 재설치 추진(1/16,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5년 만에 호주에 대사관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 호주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 대사관의 재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대사관을 통해 핵, 미사일, 인권에 관한 북한의 메시지가 호주에 전달될 수 있다고 말함.
 - 북한은 1970년대에 1년간 호주에 대사관을 유지했고 2003년 호주에 대사관을 개설했다가 2008년 1월 재정난을 이유로 갑자기 폐쇄함.

- 北 "프랑스 회사와 협력해 향료 생산"(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6일 평양의 향료제조공장이 프랑스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통신은 이날 "지난해 조업한 평양향료무역회사에서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회사는 프랑스의 한 향료회사와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프랑스 회사의 이름이나 협력 방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평양향료무역회사가 향료 산업이 발전한 프랑스로부터 기술적 도움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았을 것으로 분석됨.
 - 김명숙 평양향료무역회사 사장은 "우리 회사는 나라의 첫 종합적인 향료생산기지"라며 "앞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 많이 생산해 온 나라에 우리의 향기가 차 넘치게 하겠다"고 말함.

- 유엔아동기금 "올해 대북사업에 5천만 달러 필요"(1/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올해 대북사업에 4천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함.
 - 이는 지난해 유엔아동기금의 예산 3천800만 달러보다 1천만 달러 많은 액수이며, 유엔아동기금은 올해 대북 보건사업으로 말라리아 퇴치를 비롯한 예방 접종과 의료진 연수 및 교육, 필수 의약품 지원 등을 펴고 북한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등지의 고아원에서 어린이 1만여 명이 '중증 급성영양실조'에서 벗어나도록 영양 지원을 할 계획임.



- **北 "아베 日정부, 치욕의 과거와 결별해야"(1/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7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일본은 수치스러운 과거와 결별할 때가 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적함.
 - 통신은 이날 '치욕의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아베 총리가 지난달 31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비롯한 과거 범죄를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 등을 재검토할 의향을 표시했다며 "일본의 신임 수상 아베가 집권 시작부터 과거 범죄사를 전면부정하는 망언을 하여 국제사회 여론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함.
 - 논평은 이어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지난 3일 아베 총리의 발언을 '수치를 느껴야 할 행동'이라고 비난했다고 소개하며 "이(아베 총리의 발언)는 죄악에 찬 과거사를 부정해버리는 것으로 임기 첫걸음을 떼는 현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당한 저주와 규탄"이라고 지적함.
 - 논평은 또 "오늘 과거사에 대한 태도는 일본이 정상국가, 평화국가로 되어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느냐 아니면 군국주의 침략국가로 영원히 망하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수치스러운 죄악의 역사는 물론 그것을 비호, 두둔하던 너절한 과거와도 결별할 때가 됐다"고 일본 정부의 '용단'을 촉구함.

- **작년 중국 찾은 北주민 18만 명... '사업목적' 42% ↑ (1/18, 자유아시아방송(RFA);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
 -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총 18만600명으로 2011년보다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국가여유국의 '2012년 1~12월 외국인 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 방문 북한인 중 취업목적 근로자가 7만9천600명(4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목적 방문자가 5만2천200명(31%)으로 두 번째로 많음. 취업목적 근로자는 전년보다 4천300명(6%) 증가했고 사업목적 방문자는 1만6천200명(42%) 늘어난 것임.

- **美 AP 부사장 "北, 외국언론 진출 더 허용할수도"(1/18, 연합뉴스)**
 - 지난 14~17일 방북했던 존 다니제브스키 미국 AP통신 부사장은 18일 북한에 더 많은 외국 언론이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밝힘.
 - 서울을 방문한 다니제브스키 부사장은 이날 단독인터뷰에서 "(북한이) AP에 평양지국을 허가한 것은 그들에게는 결단이었고 그런 결단을 후회한다는 징후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북한이 아마도 앞으로 더욱 많은 외국 언론에 진출을 허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그는 "북한은 그들의 관점과 정책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한다"고 덧붙임.



- 그는 이번 방북에서 북한 측 대화창구인 조선중앙통신사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AP본사 기자의 평양상주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니제브스키 부사장은 이에 대해 "지국의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방문이었다며 "지국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조선중앙통신사와 논의했다"고 말함.
 - 최근 평양의 표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행(작년 여름)에 비해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지 기자로부터 북한TV가 교육목적에서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를 방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함.
 - 다니제브스키 부사장은 북한 미디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더욱 억압적인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욱 좋아질 것 같다"고 전망함.
- **스위스 대북사업가 "北, 무역·상업에 우선순위"(1/19, 자유아시아방송(RFA); 미니언빌)**
 - 북한과 스위스 기업이 합작한 '평스제약합영회사'의 펠릭스 앵트 회장은 "북한 정부가 무역 및 상업을 우선순위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인터넷 경제신문 '미니언빌'을 인용해 19일 전함.
 - 앵트 회장은 최근 '미니언빌'과 인터뷰에서 북한 내 사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의 변화 덕분에 북한 주민들도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힘. 또 "북한 사람들로 부터 더 많은 사업 제안서를 받고 있다"며 "과거에 이런 북한 사람들의 적극적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임.
 - **北 축구대표 박남철, 태국 프로팀 이적(1/19, 조선신보)**
 - 북한 남자축구 대표팀의 미드필더 박남철(28)이 태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뛰게 됐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9일 보도함.
 - 신문은 "조선 축구 남자대표팀의 중간방어수(미드필더) 박남철 선수가 타이 1부리그의 SCG무양통·유나이티드FC로 이적했다"고 전함.
 - 북한의 명문 축구팀 4·25체육단 소속의 박남철은 지난해 3월 아시아 축구연맹(AFC) 챌린지컵 대회에서 3골을 넣고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뽑히는 등 북한 남자축구 대표팀의 간판 미드필더로 활약해옴.
 - 신문은 박남철이 이적한 SCG무양통·유나이티드에는 북한 남자축구 대표팀의 주장 출신인 수비수 리광천이 지난해 3월부터 소속돼 있다고 설명함.
 - **北, 고종 94주기 맞아 日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비난(1/20, 노동신문)**
 - 북한은 고종 황제 94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일제가 고종을 독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신문을 통해 일본의 최근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비난함.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음.

■ 기타 (대외 일반)

- 지난해 美 정부의 향후 10년간 국방비 대폭감축 계획 대비 올해 국방비 책정(6천330억\$) 관련 '△세계제패 야망, △미군무력 증강을 가리기 위한 외교, △해외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묵살하려는 속임수'라고 주장(1.14,평방·노동신문/군사비삭감 높음은 기만이다)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美 무기수출들 관련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군비경쟁의 장본인'이라고 비난(1.15,중통)
- 【중통 논평】 日 아베 新任 수상의 '과거범죄사 전면부정 망언'(12.12.31)은 "도덕적 저열성극치, 군국주의 재침야망"이라며 '과거 청산 용단' 촉구(1.17,중통/치욕의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 오늘 과거사에 대한 태도는 일본이 정상국가, 평화국가로 되어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느냐 아니면 군국주의 침략국가로 영원히 망하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임.
 - 일본의 '독도 영유권설'은 "기만과 모략, 간교한 술책으로 일관된 완전한 억지주장, 국제법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불법무도한 범죄행위"라고 비난 지속(1.17,평방/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고유한 영토)
- 인도공산당 맑스주의 중앙위 총비서, 1.9 自國주재 北대사 '임회성' 면담(1.18,중방)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매체, 대선 후 자제하던 새누리당 비난 재개(1/14,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새누리당을 향한 비난의 포문을 다시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인용하여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다가 최근 북한인권법 문제를 계기로 연일 공격에 나서고 있는데, 통신은 논평을 통해 "얼마 전 '새누리당'의 대변인이라는 자는 저들이 발의한 '북인권법' 제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야당에 악법채택을 강박해 나섰다"며 "반공화국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려고 최후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함. 또 "새누리당 패들의 북인권법 조작책동은 존엄 높은 우리(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고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 기타 (대남)

- 【중통 논평】 새누리당이 제정하려는 '북인권법'은 "북남사이의 체제대결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또 하나의 대결악법"이라고 지속 비난 선동(1.14, 중통/동족대결의 악몽을 되살리려는 행위)
- 북방한계선(NLL)의 해상경계선 공식화 관련 '1953년 8월30일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았다'며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불법 무법의 유령선'이라고 주장(1.15, 평방/북방한계선은 불법무법의 유령선)
-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철탑 농성 관련 '반역통치배들의 악정을 끝장내야만 생존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비난(1.19, 노동신문/쌍용자동차 사태를 고발한다)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안보리, 이르면 금주 '北로켓 대응조치' 내용을 듯(1/15,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이번 주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를 내용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유엔 외교 소식통은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2주째 이어지고 있다"며 "중국도 무작정 끌 수는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다만 아직은 양국 간에 이견이 워낙 커 합의 도출 시기나 결과를 선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함. 그동안 본국의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접촉을 거부해 온 중국은 지난주부터 훈령의 수령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중국은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미국도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전언임. 중국의 이런 태도는 존 케리 차기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화파'에 속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이끌 한국의 새 정부도 대북 정책에서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지난 1일부터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협의에 직접 끼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유엔 주변에서는 양국 간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프레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후속 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미국과 중국 간에 형식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우리 정부는 이후 문안조율 과정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주요 당사국 간에 의결 형태와 문안이 합의되면 일정 기간의 '이의제기 기간(silence procedure)'을 거치게 되고 다른 이사국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보리 회의에서 공식 확정됨. 유엔 소식통은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야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은 양국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함.

- **빅터 차 "北 미사일 핵탄두 탑재 이르면 5년 내 가능"(1/15, 연합뉴스)**
 - 미국의 대북 전문가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이르면 5년 내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전망함.
 -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의 전 아시아담당 국장인 빅터 차 교수는 15일



보도된 니혼게이지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탄두 운반 능력과 관련, "머지않아 핵탄두를 탑재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용화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은 최근 수십 년간 착실히 진보했다"고 말함. 그는 "핵탄두 탑재는 이르면 5년 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년이라는 기간은 순식간이다"면서 "오바마 2기 정권의 임기 만료 이전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예상함. 그는 오바마 정권의 대북 외교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과거 4년간의 '전략적 인내'는 명백히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북한의 도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차 교수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미 50년간 실시했지만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제재를 강화해도 효과가 없다"면서 "오바마 정권은 과거 4년간의 대북 정책을 검증해, 이런 점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에 대해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면서 "이는 중국이 향후 더욱 북한 쪽으로 경사돼 국제사회의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함. 미 국무장관에 존 케리가 임명된 데 대해서는 "케리씨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그가 북한에 대한 개입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나. 미·북 관계

● 北 외무성, 유엔군사령부 해체·평화협정 촉구(1/14,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14일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촉구함.
-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비망록'을 통해 올해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됐지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유엔군사령부는 지체 없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외무성은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과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정전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배후에는 유엔군사령부라는 냉전의 유령이 있다"고 주장함.
- 외무성은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는가 마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냉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기능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그 어떤 형태의 전쟁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외무성은 특히 "이 유령(유엔군사령부)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라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불구름을 몰아오는 침략전쟁 도구로 되살아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작전 반경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반으로 넓히는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함. 또 "유엔군사령부는 원래 유엔 성원국(회원국)들의 총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이 유엔의 이름만 도용해온 부당한 기구"라며 북한군과 미군이 그동안 정전 상태 문제를 협의처리해온 만큼 유엔군사령부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외무성이 택한 '비망록'이라는 발표 형태는 북한이 주요 사건이나 현안을 정치·법률적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진상을 밝히고 입장을 발표할 때 사용해온 방식임. 북한이 비망록을 발표한 것은 올해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대외적으로 평화협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미국과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풀이됨. 북한은 지난해 10월 제67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도 "남조선 주둔 유엔사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수행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했음.

● 美 AP통신 부사장 방북(1/14, 연합뉴스)

- 존 다니제브스키 미국 AP통신 부사장이 14일 방북함.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 AP통신사 부총사장 존 다니제브스키 일행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방북 일정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AP통신이 지난해 1월 서방 언론사 최초로 평양에 종합지국을 개설한 점으로 미뤄 이번 다니제브스키 부사장 일행의 방북은 지국 개설 1주년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AP통신은 작년 1월16일 평양 중상가에 있는 조선중앙통신 빌딩의 AP 평양지국 사무실에서 종합지국 출범식을 가졌음. AP는 2006년 5월부터 영상물 전문 송출 계열사인 APTN 상설지국을 평양에서 운영했으며 지난해에는 이 상설지국을 기사와 사진, 영상물 모두 송출하는 종합지국으로 확대했음.

다. 중·북 관계

● 中지린성, 올해 두만강 지역 합작 개발 가속화(1/14, 연합뉴스)

- 북한, 러시아와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이 올해 두만강 유역 경제 벨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개방 선도구'를 앞세워 지역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길림신문이 14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왕루린(王儒林) 지린성 서기는 최근 열린 성(省)경제사업 회의에서 "창지투 전략이 국가급 전략으로 승격된 것은 개혁·개방 이래 지린성이 맞이한 최대의 기회"라며 "창지투 전략을 중요한 기치로 세우고 관련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강조함. 지린성은 이에 따라 중국의 변경도시 가운데 유일한 국가급 경제특구로 지정된 훈춘(珲春)국제합작 시범구를 중심으로 올해 변경무역, 물류, 수출가공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 유치에 주력할 방침임.
- 특히 북·중 공동관리위원회가 정식 설립된 북한 나선 경제특구와 관련, 훈춘에서 나진항으로 가는 관문인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원정리를 잇는 새 교량(일명 신두만강대교) 건설, 투먼(圖們)-나진항 구간 철도 개



조, 송전시설 건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지린성 경제기술합작국 왕즈허우(王志厚) 국장은 "대북 합작에서는 나선 특구의 체제와 시스템 건설을 중심으로 대북 송전선로와 특구 내 기반시설, 건축자재 공장 건설 등의 추진을 촉진할 것"이라며 "대러시아 합작에서는 철도, 항구, 육·해 복합운송항로 등 교통 관련 인프라 확충과 산업·자원 분야 합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현지 전문가들은 최근 훈춘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다 나선 특구에 대한 북·중 공동 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등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가는 전략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함.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사용권을 확보해 동해 뱃길을 연 중국은 2010년 말 창춘(長春)-지린-투먼-훈춘 고속도로 전 구간을 개통하는 등 나선 특구에서 50km가량 떨어진 접경도시인 훈춘을 국제적인 물류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형 사업들에 속도를 내고 있음.

● 中 외교부, 조선 핵실험 보도 관련 입장 밝혀(1/15 인민일보)

-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13일에서 20일 사이에 진행될 것이라는 조선의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함.
- 한국 '중앙일보'는 얼마 전 한국 정부 관련 인사가 조선이 중국 측에 이미 13일에서 20일 사이에 핵실험을 진행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힌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묻는 기자의 홍대변인은 "관련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일은 관련 당사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각국은 6자회담이 2005년 합의한 9.19 공동성명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답변함.

라. 일·북 관계

● 일본 총리, 납북자 문제 해결 3조건 제시(1/15, 연합뉴스)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납북자 즉시 귀국과 행방불명자 안부 확인 등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침을 제시함.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4일 정부 홍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모든 생존자의 즉시 귀국 ▲안부 불명자에 관한 진상 규명 ▲납치범의 인도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함.
- 아베 총리는 이 세 조건의 완수가 납치문제의 해결책이라면서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삼겠다고 말함. 그는 "납북자 가족 여러분이 자신의 손으로 손자 손녀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저의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고 해결에 의욕을 보임. 아베 총리는 이달 하순에 정부 산하 납치대책본부의 체제와 인력 등을 물갈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결정할 예정임. 자민당은 작년 12월 총선 당시 북한에 대해 '대화화 압력' 방침을 관철하고 납치 피해자 문제의 완전 해결과 핵·미사



일 문제의 조기 해결에 전력을 쏟겠다는 정책 공약을 제시함.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민주당 정권은 작년 8월 약 4년 만에 북한과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작년 11월에는 국장급 회담을 하는 등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화가 중단됐음. 아베 총리의 자민당 정권은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시도하는 강은 양면 작전으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마. 러·북 관계

● 러 야당 지도자 "러시아어 북한 공식어로 만들어야"(1/19, 연합뉴스)

- 러시아의 극우민족주의 성향 야당 지도자 블라디미르 쥐리노프스키가 북한 당국에 러시아어를 북한의 제2공식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건네 화제임.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야당인 '자유민주당' 당수 쥐리노프스키는 18일(현지시간) 김영재 주러 북한 대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는 수준까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포함, 상호 유익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이 최대한 결실을 보도록 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러시아어를 북한의 제2공식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함. 러시아어를 북한 공용어로 지정하라는 제안이었음.
- 소련 시절 러-북 관계가 긴밀했을 때 제1외국어로 북한에서 널리 가르쳐졌던 러시아어는 소련 붕괴 이후 그 인기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전해짐. 쥐리노프스키는 이어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권) 3개국이 맺은 관세동맹에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댄 북한도 들어올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돈과 일자리 등 커다란 가능성을 열어주는 장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함.
- 옛 소련권 3개국은 지난해 초부터 상품과 서비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는 관세동맹(단일경제공동체)을 발족시켜 운영해 오고 있음. 쥐리노프스키는 또 "이 같은 정치적 제안 외에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철도 연결 제안도 있다"며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 사업을 하루빨리 성사시켜 화물들이 태평양에서 한반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연합(EU) 항구들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쥐리노프스키는 이밖에 양국 간에 정치인은 물론, 학자, 운동선수, 기업인, 문화계 인사와 학생 등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함. 지난 1992년부터 자유민주당을 이끌어온 쥐리노프스키(66) 당수는 여러 차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며 지금은 하원 부의장직을 맡은 거물급 정치인임. 직설적이고 거친 언행과 보수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사고로 자



- '오바마 2기'의 임기와 거의 겹치는 시기에 한국을 이끌 '박근혜 대통령'에 거는 기대감이 느껴진다는 게 외교가의 분위기임. 실제로 두 사람은 12월21일 전화통화에서도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임. 박근혜 당선인은 "임기 대부분을 함께 일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하면서 "앞으로 동맹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함. 오바마 대통령도 "한미상호방위조약 60주년을 앞두고 한미 관계가 경제와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로 발전해 기쁘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함.
- 향후 4년간 한미 관계는 정책의 연속성을 토대로 더욱 강화된다고 전망하는 것은 자연스런 결론임. 특히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아 '아시아 중시'를 근간으로 하는 새 외교 전략을 추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의 경제적 유대관계 또한 긴밀함. 미국 내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 물론 '박정희의 딸'이라는 숙명적 존재 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음. 하지만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한국에서 미국보다 먼저 '여성대통령'이 나온 배경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음.
- 그러나 국의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냉엄한 외교·안보 현장에서 두 사람이 조율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음. 가장 굵직한 현안은 역시 대북 정책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 5년간 극도로 악화한 남북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음. 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 구사 과정에서 얼마나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일지는 미지수임.
- 잘 알려진대로 오바마 대통령은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책임질 국무, 국방장관에 미국 내에서 대화파로 유명한 존 케리와 척 헤이글을 내세움.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의 경우 2010년 7월 미 의회 세미나에서 오바마 1기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기조로 내세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강하게 비판함. 그는 "전략적 무관심이 대선 안된다"며 적극적인 관여정책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역설했음. 헤이글도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강하게 주장해왔음.
- 미국 내에서는 오바마 첫 임기 4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정도가 상승한데 대한 우려감이 매우 높음. 무조건으로 하는 대화에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돼 있지만 '위험한 대상' 방치에도 반대하는 것임. 이에 따라 오바마 2기에는 북한과의 접촉이 자주, 심도 있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박근혜 정부도 시기를 놓치지 않는 선제적인 남북 관계 개선 흐름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음. 오히려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경우 한반도 신뢰구축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임.
- 한미 간에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음. 당장 박근혜 당선인은 16일 미국 대표단에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얘기될 정도



로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한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함.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풀이됨.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내년 4월이면 만료돼 그 이전에 시급하게 개정 또는 연장해야 함. 양국은 현재 '농축·재처리 허용'을 놓고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 방위비 분담 협상도 간단치 않음. 경제침체의 상황이 이어지고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비를 대폭 감축하기로 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이 절실함. 자칫 쟁점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양국의 신정부가 얼굴을 붉히고, 양국내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결국 좋은 출발을 위해서는 한미 신정부가 임기 초반 어떤 관계 설정을 해나갈지가 중요함.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16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첫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미 동맹이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은 이런 점에서 시의적절함.

나. 한·중 관계

- **中, 中어민 구조에 힘써 준 韓측에 감사의 뜻 전해(1/16, 연합뉴스)**
 -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열음. 한 기사는 "14일 중국 어선 '루잉위(魯營漁) 57099호'가 전라남도 인근 해역에서 침수되자 구조 신호를 받은 한국 해경이 즉각 출동해 구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관련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부탁한다"라고 답변을 부탁함.
 - 이에 홍대변인은 "14일 새벽, 중국 어선 '루잉위 57099호'가 한국 전라남도 인근 해역에서 침수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 해양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침수된 어선과 어선에 타고 있던 14명의 어민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고, 어민 전원은 어선의 수리가 끝나는 대로 귀국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번 한국 측의 도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중국 어민을 위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힘.
- **정부, 中어선 불법어업 단속 강화(1/20, 연합뉴스)**
 -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고자 전방위 대책을 추진키로 했음.
 - 성어기인 1~4월과 10~12월에는 국가어업지도선 16척을 집중 배치하고, 집단적인 폭력 저항에 대비해 2~3척을 선단으로 묶어 단속함. 흑산도 서쪽 해역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이 집중되는 해역은 해경과 공조해 특별단속하고, 농식품부에 '단속활동 지휘반'을 운영함. 올해 200억원을 들여 1천급 어업지도선 1척을 건조하고 고속 단속정 4척을 확충함. 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위치발신구명조끼 등 12종의 개인보



호장비를 보강하고, '단속현장 모의훈련'도 함. 벌금은 최고 2억 원까지 부과하고 무허가 어업, 영해 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3대 엄중 위반행위를 한 어선에 대해선 어획물·어구를 몰수함. 2회 이상 재범자는 담보금의 1.5배(2억원 한도)까지 가중해 부과함.

- 양국 고위급회담 등에서 불법어업의 심각성을 중국 정부에 전달해 대책을 촉구하고,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연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교류를 확대키로 함. 중국 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 어업인의 어구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 정부에 어업인 지도·홍보도 적극 요청키로 했다. 지난해 불법 어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총 467척으로 2011년(534척)에 비해 13% 감소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어업조건 위반 316척(68%), 무허가 어업 119척(25%), 영해 침범 32척(7%) 등임.

다. 한·일 관계

● <日, 뉴욕주 위안부 결의안 추진 노골적 방해>(1/19, 연합뉴스)

- 미국 뉴욕주의회의 위안부 결의안을 저지하려는 일본 측의 방해공작이 본격화됐음. 18일(현지시간) 한인사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뉴욕 주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결의안을 주도하는 토니 아벨라(이탈리아계) 의원과 찰스 라빈(유대계) 의원 등 다수 의원들에게 '위안부는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이라는 주장이 담긴 일본인들의 항의성 이메일이 쇄도하고 있음. 아벨라 의원실은 "이들 이메일은 위안부 여성이 돈을 벌려는 성매매 여성이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한 상원의원은 170여 통의 이메일을 받기도 했다"고 밝힘. 뉴욕 지역 첫 한인 정치인인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도 200여 통의 이메일을 받음.
- 지난 16일 뉴욕주 상하원에 동시 제출된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지시로 만들어진 위안부는 집단 강간과 강제 낙태, 성폭력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규탄하면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음. 한인사회는 다수의 의원들이 호응하고 있어 이르면 상반기에 결의안 채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하지만 뉴욕주 의회가 이번 회기부터 국제 문제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도입했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아벨라 의원실은 "결의안은 미국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의 의미를 알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자는 취지"라며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문구를 변경해서라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침.
- 일본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이슈로 부각하려는 한인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 지난해 11월에는 일본의 극우파 인사들이 미국 뉴저지주의 지역 신문인 스타레저에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물의를 빚음. 일본의 극우파 저널리스트인 사쿠라이 요시코와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 무소속 의원 39명은 이 광고에서 '성노예'로 묘사되는 위안부들이 허가를 받고 매춘행위를 했으며 수입이 일본군 장군보다도 많았다는 망언을 늘어놨음. 또 일본군이 인신매매 사건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역사 왜곡으로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함. 같은 해 10월에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팰팍)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에 일본 극우단체에 의한 '말뚝 테러'가 발생해 한인 사회의 공분을 샀음.

라. 미·중 관계

- **中,美 타이완 무기판매 반대"양안문제 양안인 해결"(1/16, 인민일보)**
 - 국무원 타이완사무관공실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양이(楊毅) 대변인은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정책에 대해 중국 대륙 측은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고 아울러 미국이 3개 연합공보의 정신을 준수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키길 희망한다고 밝힘.
 - 양이 대변인은 양안 간 문제는 결국 양안의 중국인들이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은 양측이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하여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양안 동포와 중화민족에게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함.

마. 미·일 관계

- **"美, 日에 '고노담화 수정 우려' 전달"〈교도〉(1/17, 연합뉴스)**
 - 미국이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수정 가능성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전한 뒤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문제가 정치 문제로 발전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반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지난 6일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가 지난해 말 일본 측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고 "일본이 고노 담화를 수정할 경우 미국 정부로서 뭔가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교도통신은 또 같은 관계자를 인용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18일 워싱턴 D.C.에서 만나 중·일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 관계자는 대화 형식에 대해서는 "외교 프로세스에 대한 제안이 있다"고 추상적으로 설명했고 미·일 외교 장관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미일 외교장관은 회담 후 센카쿠 주변의 갈등을 진정시키고 우발적인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오전 도쿄에서 기시다 외상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양호한 중일, 한일 관계는 관계국 모두에 최선의 이익"이라며 일본에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함.

● 미·일 외교장관 "강력한 대북조치 필요"(1/19,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정부는 18일(현지시간) 지난해말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함.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양자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힘.
- 클린턴 장관은 발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조치(strong action)'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면서 "아울러 남북 일본인 송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노력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함. 기시다 외상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일 양국 간,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인했다"면서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가능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함. 그는 아울러 한·일 관계에 대해 양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함.
- 클린턴 장관은 중·일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에 대해 "미국은 영유권에 대해서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면서 "다만 센카쿠 열도가 일본 행정권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본 행정권을 훼손하려는 일방적인 행위에 반대한다"고 말함. 이에 기시다 외상은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유지하겠지만 중국을 도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함.
- 이와 함께 양국은 국제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에 데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일본이 가입하는데도 사실상 합의함. 클린턴 장관은 "일본 의회가 곧(협약 가입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기시다 총리도 "일본 정부는 조속한 조약 서명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말함.
- 양국 외교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일본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나타냄. 클린턴 장관은 "이는 모든 참여 국가들에 대해 엄청난 경제적 기회이기 때문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함. 그러나 기시다 외무상은 "(TPP협상 참여에 대한) 일본 새 정부의 견해와 일본 내에서 진행 중인 논쟁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음.
- 이날 회담에서 미국 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신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3번째 주에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도록 초청했



으며 일본 측도 이를 수락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고위 당국자로는 처음 미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와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물러나는 클린턴 장관의 이날 회담에서는 이른바 '고노담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으나 두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음.

- 한편 이날 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알제리 인질 사태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브리핑을 받았으며, 회담에서도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함.

바. 중·일 관계

● '일본의 중군용기 활동 방해' 관련 중입장 밝혀(1/14, 인민일보)

-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1일, 중국 군용기의 동중국해 영공 비행은 정례 비행이라고 밝힘. 당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방위성 관리가 여러 대의 중국 군용기가 10일 정오에 동중국해 영공,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출현해 일본 자위대의 F-15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켰다고 밝힌 데 대해 한 기자가 중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질문함. 홍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의 동중국해 영공 비행은 정례적인 일로 중국은 일본 측의 사태 확대를 통한 긴장감 조성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전함.
-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 밖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 신문사무국 관리는 10일 중국의 윈(運)-8(Y8) 전투기가 윈저우(温州) 동쪽 이하 동중국해 유전 서남쪽 영공에서 정례 비행을 실시하자 일본 항공 자위대 F-15 전투기 2대가 근거리로 접근해 오고, 또 1대의 정탐기가 본 영공을 비행하는바 중국 측은 이에 2대의 쟌-10(殲10) 전투기를 출동시켜 감시를 실시했다고 밝힘.
- 또한, 최근 일본 자위대 전투기의 중국 측에 근접한 정찰 활동이 점점 강화되면서 전투기의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측의 공무 비행기의 정상적인 순항과 군용기의 정례 비행 활동을 자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중일 해상 영공 안보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함. 일본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중국 군대는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의 영공 방어 안보와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수호할 것이며, 일본 측이 관련 국제법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해상 영공 안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희망한다고 전함.

● 중국 환구시보 센카쿠 긴장 속 '전쟁 불사' 선동(1/15, 연합뉴스)

- 강한 민족주의 성향의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중국이 전쟁을 불사할 때라는 극단적 주장을 폈음. 이런 언급은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놓고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과 치열하게 대치한 가운데 나온 것임.
- 환구시보는 15일 '30년의 평화 뒤 전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함. 환구시보는 "베트남과 국경 문제가 평온해지고 나서



30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아 전쟁은 우리에게서 매우 멀리 떨어진 느낌"이라며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 사회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힌.

- 환구시보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상대 나라들이 힘을 합쳐 중국 억제에 나서 전쟁의 경계에서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면서 중국이 여기서 물러난다면 전략적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면서 외부의 압력이 한계선을 넘어서면 중국이 조금의 머뭇거림 없이 군사적 반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런 전쟁은 중국의 평화적 발전 전략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덧붙임. 환구시보는 전쟁을 불사하는 태도야말로 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설사 전쟁이 발발해도 상대방이 중국에 휴전을 먼저 요청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최근 센카쿠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일본 전투기들이 대치하는 등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영유권 분쟁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 훈련을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음.

● **中, 아베 日총리 釣魚台 관련 발언 입장 밝혀(1/18, 인민일보)**

-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태국 방문 기간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힘.
- 아베 일본 총리는 태국을 방문하는 동안, 釣魚台(釣魚島)가 일본의 영토임을 강조하는 한편 일중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은 "중국은 釣魚台 및 부속 도서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진다. 이는 역사적으로 또 법적으로 매우 분명하며 중국은 일본이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중국 측과 관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답변함.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일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중일 4개 정치문건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하길 주장하며 현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釣魚台 문제에서 성의를 보이며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임.

● **하토야마 前일본총리 "일본군이 저지른 범죄 사과"(1/18, 신화망)**

- 하토야마 총리는 당시 일본군이 자행한 범죄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힘. 17일 오전,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난징에서 일본 침략군 난징대학살 피해자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위와 같이 밝힌 것임. 참관 중에 그는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동상과 유골에 합장을 하고 참배를 하였음. 하토야마 전 총리는 무리아마 전 총리와 카이후 전 총리 이후 세 번째로 추모 기념관을 방문한 일본 전 총리임.
- 9시 30분, 하토야마 총리 일행이 일본군의 난징대학살 피해자 추모 기념



관에 도착함. 주청산(朱成山) 관장과 짧게 면담을 가진 이후에 그는 추모 광장으로 향했으며 부인과 함께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림. 그 후 주 관장의 해설을 들으며 난징대학살 사료 전시실을 둘러보았음.

- 참관 중에 하토야마 총리는 당시 난징에 거주하던 인구 및 피해자 수에 대해 특별히 물어보았음. 주 관장은 전시실에 있는 '동경 재판 판결서와 '난징군사재판 판결서' 가운데 난징대학살에 관한 서술 부분을 가리키며 일본이 난징으로 진격하기 전에 난징 전체 인구는 100만 명을 초과하였으나 난징대학살이 자행되면서 사망자 수가 30만을 넘었고 이는 동경 재판과 난징 군사 재판에서 낸 판결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강조하였음. 이와 함께 1951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극동 국제군사재판과 기타 일본 국내 혹은 해외 동맹국 법정의 재판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힘. 하토야마 전 총리는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임.
- 전시실을 나와 하토야마 전 총리는 생존자들의 발자국을 남겨놓은 동판길과 만 여명의 피해자 명단이 새겨진 통곡의 벽, 피해자 유해를 남겨둔 만인갱 유적 등을 둘러보았음. 유적에 켜켜이 쌓여 있는 백골들을 보고 하토야마 총리는 무거운 사색에 잠겼으며 다시 한 번 합장을 한 채로 묵념을 드림.
- 추모 장소를 지나 기념관과 평화의 무대에 도착하자 무대 양쪽 기둥에는 "복수를 맹세하지 않고 난징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크나큰 사랑으로 영원한 세계 평화를 기도한다"라고 새겨져 있었음.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 구절에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히며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함.
- 2시간에 걸친 방문이 끝난 후 하토야마 총리는 방명록에 '우애화평(友愛和平)'라는 글씨를 남겼으며 낙관을 하면서 특별히 그의 이름 가운데 유(由)자를 우(友)로 고쳐 씀. "저는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과를 드리는 바이며 진심으로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심은 평화의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다시 한 번 이곳에 오겠습니다"라고 하토야마 총리가 밝힘.

● 일본 아베, 시진핑에 친서...조기 정상회담 제안(1/20, 연합뉴스)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국의 시진핑 총서기에게 친서를 보내 양국 간 관계 개선을 모색함.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22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공명당의 아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만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음.
- 아베 총리는 아마구치 대표를 통해 시진핑 총서기에게 친서를 보내겠다는 의향을 표명했음.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을 중국 측에 요청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함.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중국과 관계에 여러 가지 알력이 발생했다. 정부 간 대화를 계속해 관계 개선을 시도하겠다"면서 "(아마구치 대표의 방중을) 그 일보로 삼고 싶다"고 기대감을 표시함.
- 자민당 정권과 연립을 구성해 국정에 참여한 아마구치 대표의 중국 방



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으로 심각하게 갈라진 양국 외교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됨. 아베 총리는 작년 12월 26일 취임 이후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 하면서 아세안, 한국 등과는 적극적인 외교 관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중국에는 강경 자세를 보임. 아베 총리는 최근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택해 대(對) 중국 포위망 구축에 힘을 쏟았음. 중국은 센카쿠 문제에서 강경 자세를 보이고,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과 국방비 증액 등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는 아베 정권을 불신하고 있어 조기 정상회담에 응할지 불투명함.

사. 일·러 관계

● 러, 日 아베 정권 쿠릴열도 영유권 주장 일축(1/15, 연합뉴스)

- 러시아는 지난해 말 출범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4개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14일(현지시간) 밝힘.
- 러시아 외무부 부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이날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답하면서 "남(南)쿠릴열도 섬들은 2차 대전 종전 이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해당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어떤 발언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함. 자하로바는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러 분야에 걸친 양국 간의 적극적인 관계 발전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러한 입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루어진 양국 정상(푸틴 대통령-아베 총리)간 전화통화에서도 확인됐다"고 주장함.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최근 아베 정권이 이전 정권에 서와 마찬가지로 북방영토 4개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확고히 할 것이며 다만 섬 반환 시기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 문제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음.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 조약을 근거로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남부 4개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일본은 또 쿠릴열도 반환을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음. 러시아는 그러나 쿠릴열도가 2차 대전 종전 이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으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일본은 옛 소련 시절인 1956년 러시아와 쿠릴열도 2개 섬 반환과 2차 대전 종전을 마무리하는 평화조약 체결을 맞교환하는 공동선언문에서 명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4개 섬 일괄 반환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